

「민군 갈등의 유형과 해소전략」 토론요지

이 명 숙 박사 (한국공공행정학회)

1. 본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군사기지 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주체로 변화하면서 민군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 입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민군 간의 공감대를 조성하여 지역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며, 군사기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전환하여 국가안보의 확립을 위한 민군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군사시설의 안전한 입지를 위한 것이다.

2. 군사시설의 빠른 이전만이 국가안보와 주민을 위해 바람직한 일인가?

본 연구에서 갈등의 결과에 시당국의 적극적 개입 촉구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용인 포곡항공대의 이전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갈등의 관리나 해소보다는 군사시설의 이전을 촉구하여 지역과 주민의 이익을 취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의 향후 과제에서도 지역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 당국 ·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제시되었는데, 이럴 경우 군사시설의 빠른 이전만이 갈등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가? 군사시설은 무조건 옮겨야 하는 것인가? 군사시설은 어디로 이전하란 것인가?

주민 가까이 있는 군사시설을 이전하는 것만이 국가안보와 지역주민을 위해 바람직한가를 검토해야 시점이다. 적극적인 갈등개입이 갈등 해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군사기지이전을 촉구하고 군사기지입지를 거부하는 자세가 바람직한가?

3. 효과적인 갈등해결전략

많은 지역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또는 주민의 이익과 관련하여 극심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방부가 관련된 민원은 군부대 이전과 사격장과 같은 훈련장 등 비선호시설의 이전과 같은 님비(NIMBY)갈등이 대부분이다.

5월 23일 현재 국무조정실이 관리하고 있는 ‘현재 갈등과제 50개’ 중 12개로 이전이나 보상관련 지역과의 갈등이다. (동아일보 5월 24일 보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조정이 안 될 경우 공식 갈등조정기구인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조정결과에 불응하는 사례가 많아 갈등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갈등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 연구가 부족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갈등을 관리하기위한 갈등조정·중재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갈등전문가로 하여금 갈등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이를 일관되고 통합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갈등해결전략으로는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정치성향에 흔들리지 않으며 일관성있게 정책이 수행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군사시설의 이전추진과 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으로 군사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상생할 수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갈등의 조정·중재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갈등전문가를 양성하고 갈등당사자를 포함하는 갈등관리기구를 구성하여 다양한 갈등관리방책들을 연구해야 한다. 제3자인 갈등전문가가 함께하여 객관적인 방향에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는 것이다. 갈등해결에 전문성을 갖춘 갈등조정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갈등조정사의 양성을 적극 추진해야한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갈등현안들을 조율할 수 있는 한국적 갈등해결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